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

인쇄/1999년 2월 19일

발행/1999년 2월 22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국제관계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9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67-2

3,500원

연구 보고서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

김 영 춘

민족통일연구원

빈 면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일본은 한반도 안정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북한간의 가교역할을 희망하고 있는 바, 북·일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 및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 자금이 ODA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외원조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일수교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원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대외원조정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원조는 1954년부터 아시아제국에 대한 배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이 전쟁 때문에 상대국에 피해를 준 손해에 대한 배상엔차판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중국, 한국 및 만주에서 잃은 시장과 원료공급을 동남아시아에서 구하면서 동지역과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하였다. 이시기의 원조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서 결정되었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일본의 원조는 상업주의에 의한 원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조의 정치적 이용은 냉전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의한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1960년대 일본은 사토수상시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1973~74년의 OPEC에 의한 석유위기에 처해졌으며 동시에 원조의 확대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1970년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원조는 에네르기와 자원을 필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되었다. 원조정책은 금액과 대상국을 확대시켰으며, 그 범위는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아프리카·중남미까지

이르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원조의 이념으로서의 인도적 고려 및 상호의존이라는 이념이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말부터 「총합적 경제원조」(혹은 총합적 원조협력)라는 개념이 원조정책으로 정립되었다. 이전의 개념인 경제협력과 총합적 경제원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총합적 경제원조」라는 것은 보다 넓은 외교목적에 이용 가능한 국가자원을 실제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좁은 상업적 이익의 구속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페르샤만에 대한 접근과 원조의 이용은 일본이 비군사적 대국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중재자로서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려는 차원의 것이다.

일본이 이란·이라크전쟁의 정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양측간의 가교 역할하려는 것이다. 가교라는 용어는 일본이 동서간, 남북간, 북중간, 베트남·ASEAN간, 남북한간 등의 가교가 되려는 의지의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베트남, 북한 등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보조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65년 6월 22일, 일본과 한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을 위해 일본은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무상 3억달러, 유상(정부차관)2억달러 그리고 민간상업차관 1억달러를 제공하였다. 이는 아시아의 공산세력에 대한 자유진영내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정부에 결단을 촉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외원조를 수행하는 배후에는 크게 나누어 2가지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해외에서 일본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경제이익론」(혹은 경제·금융면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경제적역할론」)이다. 둘째는 필리핀정부의 안정을 위한 원조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외교적성과를 중요시하는 「정치협력론」이다.

2. 북·일수교시 일본의 대북한 원조 및 경제협력전망

북·일 수교교섭은 보상문제, 과거사 문제, 관할권 문제, 이은혜 및 납치의혹 문제 등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일본측은 북·일 수교교섭을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일 수교교섭에서 보상문제를 재산·청구권 문제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국교정상화 이전에 경제협력·배상은 하지 않을 것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진전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 대북경제협력이라도 한국에의 ‘배상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대북압력수단으로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북한은 보상문제에 있어서 한·일수교시의 방식에 의거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수교시 보상액수는 양측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내세우면서 한·일 기본조약 당시 한국에 제공한 ODA원조 무상 3억, 유상(엔차관) 2억달러의 연체이자를 감안한 액수(약 40억달러 상당)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소한 1백억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서 양측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따

라서 일본이 북한과 수교시 제공할 ODA는 약 40억달러에서 약 100억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보상은 현물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인적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이 보상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북한이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면, 이는 장래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교후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의 개발에 참여시킬 것이다. 또한 조총련기업을 앞세워 추진하던 합영 및 위탁가공 사업에 일본기업을 진출시킬 것이다.

북·일수교후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공여되는 보상금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북경제협력은 적어도 북한의 재정적 붕괴를 막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시 그만큼 한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북한 경제가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남한과의 경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협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과의 개방 및 경협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이에따라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국은 모색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대북 정책분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대일 무역거

래보다는 민족간의 거래가 보다 유익함을 설득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의 과도한 대북 경제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보상금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일수교시 일본이 북한에 ODA를 제공(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할 때, 일본은 북한에게 자국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은 미국과 정치·경제·외교·안보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고도 폭넓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
II. 대외원조정책의 변화과정	3
1. 냉전기 대외원조정책	3
가. 배상 및 상업주의 정책 (1953~1963)	3
나. 정치·전략정책 (1964~1977)	4
다. 총합적 안보정책 (1978~1988)	6
2. 탈냉전기 대외원조정책	10
가. 적극적 외교·전략정책 (1989~현재)	10
III. 사례연구	20
1. 냉전기	21
가. 일본의 대한국원조의 경우 (1965)	21
나. 일본의 대필리핀원조의 경우 (1983~1988)	25
2. 탈냉전기	36
가. 일본의 대미얀마원조의 경우 (1988~1991)	36
IV. 북·일수교시 일본의 대북한 원조 및 경제 협력 전망	40
1. 일본의 대북한원조정책	40
2.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	45
3. 남북한 경제협력	47
V. 결 론	49

I. 서론

1989년 일본의 대외원조 제공액은 89억 6,500만 달러에 달하여 미국의 78억달러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세계최대의 원조제공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엔화의 가치절상 때문에 원조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수혜국으로서는 분명히 많은 금액이었다. 특히 1970년부터 1990년의 20년 사이에 일본정부는 3배의 원조자금을 정부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의 원조자금은 계속 증가하여 최근까지 1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자원대상국도 초기의 6개국에서 1991년에는 31개국으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부진과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맞아서 일본정부는 1997년 이후 매년 10%정도의 대외원조기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는 1954년부터 아시아제국에 식민지보상책으로 배상금 대신 엔차관을 지불한 것이 시초이며, 자국의 수출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외무성은 일본이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로 ①경제대국으로서의 입장, ②세계 제1의 채권국·후자국으로서의 입장,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④평화국가로서의 입장, ⑤비서구 국가로서의 유일한 선진국으로서의 입장 등 5항목을 지적하였다¹⁾

1989년 6월 런던의 Economist誌에 의하면, 일본은 제3세계라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적극적인 ODA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제3세계에 대한 일본외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ODA원조 동기에 관해서 박애주의 혹은 「개발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라고 보았으며, 정치가들은 일본원조의

1) 外務省經濟協力局, 「我が國の政府開發援助」(上), 1989, pp. 20~22.

2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프로그램을 「일본의 주요한 외교수단」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향후 ODA와 평화유지활동(PKO)은 상호연계되어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반도 안정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북한간의 가교역할을 희망하고 있는 바, 북·일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및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 자금이 ODA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외원조정책을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누어 배경과 내용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일수교의 협상과정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원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대외원조정책의 변화과정

1. 냉전기 원조정책

가. 배상 및 상업주의정책 : (1953~1963)

일본의 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는 同정책의 전개가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원조는 배상 및 상업주의정책(1954~1963), 정치·전략정책(1964~1977), 총합적안보정책(1978~1988) 그리고 냉전이후 일본이 최대원조제공국의 된 1989년 이후의 적극적인외교·전략정책시기로 나누어 볼수있다.²⁾

1954년부터 63년까지 일본의 원조정책은 배상 및 상업주의 정책이었다. 이시기 일본은 제2차 대전중에 점령하에 있던 동남아제국에 대한 전쟁배상협정 혹은 경제협력협정을 교섭하였다. 1958년 일본의 2국간 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또 1954년 일본은 콜롬보·프랜의 참여를 계기로 다국가 원조를 개시하였다.

일본의 원조의 源流는 1954년부터 아시아제국의 배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의 전쟁 때문에 상대국에 피해를 준 손해에 대한 배상이었다. 이 경우 원조에 있어서 상대국이 돈을 어떻게 쓰든가 그것은 자유이다. 1958년 최초의 제1호 圓차관은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인도에 제공되었다. 일본은 이 당시 중국, 한국 및 만주의 잃은 시장과 원료공급을 동남아시아에서 구하면서 동지역과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하였다.

2) 横田洋三, “岐路に立つ日本の政府開發援助,” 『國際問題』 (1997. 10); 五十風武士編, 『日本のODAと國際秩序』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나. 정치·전략정책 : (1961~1977)

다음시기는 1961년부터 77년까지 정치·전략정책을 편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컫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맹, 동경올림픽 등으로 상징되는 1964년부터 제1차 석유위기가 진정되고, 전후배상이 종료(1976)되었으며, 5개년 원조배증정책(1977)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의 ODA실적은 1964년 1억1,600만 달러에서 1976년에는 11억100만 달러로 10배의 신장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협력사업단(1974) 등 주요한 원조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당시 원조제공의 이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원조목적으로서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일본의 수출진흥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개발원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엔차관이 제공되었다. 당시의 일본은 경제력이 약한 단계에서 원조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국의 경제보다 일본경제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일본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이지만 상업주의³⁾에 의한 원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1973~74년의 OPEC에 의한 석유위기에 처해졌으며 동시에 원조가 증대하는 시기이다. 즉 이시기에 원조는 에너지-자원을 필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되었다. 원조정책은 금액과 대상국을 확대시켰으며, 그 범위는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아프리카·중남미까지 넓혔다. 특히 일본은 ASEAN에 주목하였고, 석유공급을 위

3) Alexander J. Caldwell, "The Evolution of 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1950-1970" in Hardod B. Malmgren(ed.), *Pacific Basin-Development: The American Interests*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72), pp.23~60. Rouert A. Scalapino, "The Foreign Policy of Modern Japan", in Roy A. Macredis(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8th edition (Englewood Cliffs, N. J.: Printice Hall, 1992), pp.207. 186~221. Steven W. Hook, *National Interest and Foreign Aid*,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ing, 1995), p.69.

해 인도네시아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시기의 원조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서 결정되었다. 원조의 정치적 이용은 냉전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의한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65년대 일본은 사토수상시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원조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는 당초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은 원조정책에서 「정경분리」 방식을 사용하였다.

1973년의 OPEC에 의한 오일쇼크는 일본의 경제원조를 전지구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중동에 정치적 특사를 파견하여 동지역과의 무역을 확대시켰고, 친아랍, 친파레스타인의 입장을 각각 취했다. 이러한 자원의외교의 수단은 경제원조였고, 이 원조는 중동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개발에 투입되었다. 일본의 원조정책은 60년대에 거의 100%를 아시아에 제공하였고, 70년대에는 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30% 정도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원조의외교는 일본의 고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 실제, ODA는 일본의 대미정책의 일환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1975년에 사이공함락과 미국의 동남아철수,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란 인질위기, 지미카터정권 초기의 주한미군철수 의향, 소련군의 아시아 증강 등의 일련의 사건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외교정책의 태동을 야기시켰다.

일본인은 세계경제와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힘과 리더십의 저하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태의 진전

4) 田中義皓, 「援助という外教戦略」(東京: 朝日選書536, 1995), p.126

과 미국경제의 생산성 저하, 실업의 증가 및 스테그플레이션의 만연에 대하여, 일본경제는 미국의 영향력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미·일 무역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방위논쟁도 시작되었다. 방위논쟁의 결과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 총합적 안보정책 : (1978~1988)

總合安全保障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그것을 방지 또는 제어하기 위한 비군사적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1970년대 말, 오히라(大平)정권하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80년 스즈키(鈴木)정권에 의해 국가정책이 되었다.⁵⁾ 그것은 정부가 폭넓게, 인도주의, 상호의존 및 총합안전보장이라는 세개의 기둥에 기초하여 「원조철학」을 만들었는데, 이는 세 개의 기둥의 상호관계는 애매하였지만 원조가 외교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였다.

1978년부터 정부개발원조(ODA)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⁶⁾ 냉전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1988년의 다음해인 1989년에는 ODA예산(89억

5) 外務省 經濟協力局編, 「我が國の政府開發援助(上卷)」(國際協力推進協會, 1987年) 스즈키내각은 원조에 대한 전략적개념을 후퇴시키는 대신 비군사적 수단도 안보의 요소로 파악하여 총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을 만들었다. 이전까지 일본의 전략요소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안보상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일본으로 하여금 원조를 제공·증액하도록 요청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는 원조를 의미하였다.

6) 1978년 일본은 ODA 제1차 중기목포(3개년 배증계획)을 발표하였다. 1978년 일본은 엔차관을 원칙적으로 무조건화 원조(Untied Loan)로 바꾸었다. 이 결정은 시장 및 자원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통산성 및 산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70년대이후 급격히 불어난 무역흑자에 따른 국제사회 자금 재분배의 측면에서 ODA가 확대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의 흑자를 배경으로 무조건화가 더욱 신장되었고 1994년에는 무조건화 원조율이 81.5%까지 확대되었다. 經濟協力 政府開發援助, 「世界の動き」(臨時増刊), 1996. 2. pp.21~22.

6,500만달러)으로 미국(78억달러)을 앞질러 세계 제1의 원조제공국이 되었다.

당초 ODA는 배상중심이었으나 국제기관에 협력이 커지면서 무상원조(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로 발전되었다. 최근의 ODA는 국제기관에 협력(구성비율 3), 2국간의 유상차관(구성비율 4), 그리고 2국간의 증여(구성비율 3)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상차관은 주로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제공된다. 또, 2국간의 증여에 있어서 기술협력은 주로 국제협력 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남북의 경제격차가 심화되면서 북측의 원조공국이 남측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조제공이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이념이 상호의존이다. 따라서 일본은 1952년 세계은행에 가입하였고 1960년에는 국제개발공사(IDA)에 회원국이 되었다. 1961년에는 선진국의 원조공여국의 회합인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다. 또한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해외경제협력기금은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 「엔차관」을 제공하는 정부관계기관이다. 일본 수출입은행내에 있던 조직이 독립하여 1961년 설립되었다.

국제협력사업단은 1974년 그 당시까지 있던 여러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사업내용은 도상국의 연구원을 일본에서 연수시켰고(88년도, 약 7,500명), 일본의 전문가를 도상국에 파견하였으며(약 3,700명), 조사단을 파견하였다.(약 6,400명) 무상의 자금협력을 지원하였다.(405건, 약 1,900억엔)

1980년대에는 국제적 지역적 환경속에서 원조의 「정치화」를 맞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정치적·전략적·외교적 수단으로서 특정국가에 원조를 주기 시작하였다. 원조정책이 다각적 성격을 띄었고 ODA는 일

본의 외교정책전반의 제목표에 들어가게 되었다.

1980년에 들어오면서 원조의 이념으로서 인도적 고려 및 상호의존이라는 이념이 확실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ODA 문제의식은 ODA 공여국가인 선진공업국(北)과 피공여국가인 개발도상국(南)과의 사이에 거대한 경제적 격차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소는 시도하려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ODA는 다음과 같은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를 배경으로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북에서 남에 대한 ODA는 「남북은 하나의 세계경제속에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상의 제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상호의존관계의 인식」을 기본이념으로서 전개시키고 있다.

「경제선 없는 경제」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전세계적 규모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교류, 혹은 일연의 채무위기, 최근에는 국제公共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듯이, 남북이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이는 대칭성이 아니고 비대칭성으로 특징 지을수 있다. 남북간의 이러한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것은 북의 선진공업국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구조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 뿐만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남의 개발도상국은 북의 구조적인 힘에 대항해서 그것을 흡수·무력화하는 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남북간에는 지배·종속이라는 권력관계의 계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인 劣位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히 北에 대한 Bargaining Power 등에 있어서 열세인 南의 개발도상국은, 형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술적 정치화」 등의 수단에 힘을 쓰려고 노력하

고 있다. 그 결과 북과의 관계는 고도의 긴장관계(분쟁)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정부가 경제원조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대일압력의 증대에 대한 유효한 대처법이 되었다. 미국은 카터정권말기,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및 이란 인질사건 이후 일본에 군비증강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대응하며 일본정부는 헌법과 국내여론을 이유로 군사력으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비군사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원조에 대한 상업적 논리에 참가하여 정치적·전략적 논리를 명시하였으며,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전략적 諸國·諸지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강인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전략적 목적하에서 원조를 제공하였다. 1979년 오히라외상은 타이, 파키스탄, 터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분쟁 주변국」 방식을 고안하였다.⁷⁾ 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후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동결하였고,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괴뢰정권 수립 후에는 아프카니스탄에 대하여 일본은 원조를 동결시켰다.

나카소네(中曾根)내각은 중국원조를 촉진시켰으며, 1987년에는 남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소련의 진출을 막기위하여 「創成독트린」이라는 원조구상을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자원외교에 기초가 되었던 국가안전보장 개념에 관한 미국의 비판과 압력을 받았으며, 일본의 흑자를 삭감하는 수

7) Dennis T. Yasumoto, *The Manner of Giving : Strategic Aid and Japanese Foreign Policy*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86). 田中義皓, 「援助という外教戰略」(東京: 朝日選書536, 1995), p.135

단으로 되었다.

2. 탈냉전기 대외원조정책

가. 적극적 외교·전략정책

원조가 일본외교의 중심적인 목표와 양식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에는 그렇게 볼 수 없었다. 원조는 종래 경제·상업적 측면, 인도주의적 측면, 상호의존의 측면, 정치적·전략적 측면에 구분되어서 제공되었다. 원조정책의 이런것들의 측면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외교정책 전반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는 불분명하였다. 전체적 결과로서,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원조의 역할, 기능 및 의의는 불분명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원조가 來世紀에 비군사적 대국의 지위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새로운 비군사적인 국가운영의 支柱로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일본은 제3세계의 경제개발문제(특히 채무문제)의 해결에 공헌하였고, 고민하는 제3세계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에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세계 최대의 債權國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채무구상에 관한 중요한 구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란·이라크전쟁,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등의 지역적 긴장에 대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케시다(竹下)수상이 발표한 1988년 5월의 「국제협력구상」이다.

즉 동구상은 국제적인 평화유지노력, 경제원조의 확대(및 개선), 그리고 국제교류의 확대에 일본이 공헌하는 일을 공약하고 있다.

다케시다수상 시절의 원조정책을 보면 對 ASEAN원조 20억 달러 對 중국원조 60억 달러, 향후 5년간(1988~93, 5개년계획)에 있어서 ODA 500억 달러의 공약을 내놓았다.⁸⁾

다케시다 수상은 선거의 감시, 수송, 통신 및 의료 등 국제관계의 평화유지사업에 옹서버를 파견하는 공약과 함께 적극적인 외교자원인 인적자원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원조는 총합적인 비군사적 외교 어프로치의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페르샤만 정책은 새로운 원조중심적 적극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① 페르시아만에 있어서 정밀항해 시스템의 설치에 100만 달러를 제공했다. ② 페르시아만, 레바논, 아프카니스탄에 있어서 UN의 평화유지 노력에 2,000萬 달러를 제공했다. ③ 오만에 2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④ 이란과 이라크에 정권후의 부흥원조를 주장하였다. ⑤ UN사무총장의 이란, 이라크전쟁에 대한 조정노력에 1,0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⑥ 레바논의 UN 暫定軍에 300달러를 원조하였다. ⑦ 요르단 강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난민의 긴급원조로서 50만 달러를 제공했다. ⑧ 중동의 미국인 인질해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⑨ 페르시아만의 안전항해를 위해 이란과 이라크에 정권을 제안하였다. ⑩ 이란과 이라크의 전면정전(全面停戰)을 위한 중재노력을 하였다.

일본의 페르샤만 정책에는 과감한 외교정책을 통해 비군사적인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조정책은 다양하

8) "Takeshita Announ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 " *Japan Report* (May 1988). pp.1-2 Dennis T. Yasutomo, "Why Aid?: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pp.490. Tsuno Akaha,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31, no. 4, April, 1991, pp. 324~340. 참고로 1995년도 ODA는 145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고 본격적인 정치적·외교적·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미국과 서방동맹국, 중동과 페르시아만 제국, 파레스타인해방기구, 그리고 UN의 이익에 대응하고 있다.⁹⁾

일본의 페르시아만에 대한 접근과 원조의 이용은 일본이 비군사적 대국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중재자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이란·이라크전쟁의 정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양측간의 가교 역할하려는 것이다. 가교라는 용어는 일본이 동서간, 남북간, 북중간, 베트남·ASEAN간, 남북한간 등의 가교가 되려는 의지의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즉 베트남, 북한등에 원조를 제공하고 하려는 것은 지역안정을 위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교목적에 국가의 금융적 자원을 이용하는 일이 확대된 것은 최근의 원조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금융적인 외교수단에 일본이 반응하는 일은 「정부」 원조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일본은 ODA의 성격과 역할을 변경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점은 최근의 채무계획구상에 의한 예를 볼 필요가 있다.

1987년 일본은 흑자를 채무국에 還流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의 자금환류조치를 발표했다.¹⁰⁾ 이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즉 국제개발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민의 자금협력 80억달러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에 참가하여, 일본수출입은행 및 해외개발 협력

9) Takashi Inouchi, "Japan's Images and options : Not a challenger, But a supporter," *Journal of Japanese Studies* (Winter 1986), pp.95-119.

10) Hiroshi Okuma, "Japan in the World : The Capital Recycling programme," *Trocaire Development Review*, 1988, pp.69-83

기금으로부터 차관 등 90억 달러, 그리고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직접융자 30억달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전년의 국제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100억 달러의 자금환류조치에 계속된 것으로, 그 결과 원조배증공약에 참가되어, 3년간에 합계 300억 달러가 환류되는 결과가 되었다.

200억 달러 환류조치에 있어서 ODA는 재원의 대부분이 일본 수출입은행의 것이며, 동경자본시장에 있어서 조달 및 민간부분과의 협조 용자에 의한 것이었으나 동 조치에 있어서 ODA의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일본은 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과 더불어 국제적 압력도 받았다. 그래서 동 조치는 정부원조계획이라는 것보다 일본의 상업적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 확실히 기술적인 면에서 이 조치는 ODA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 비판은 원조정책의 다른 하나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당면의 多岐에 걸친 정책상의 요점에 프로그래밍한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경제원조정책을 ODA이외에 확대하는 것이었다.

「경제원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언급하였지만, 그것은 ODA 그 타정부 자금 및 민간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 타정부 자금과 민간자금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ODA가 점하는 비율을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원조」는 압도적으로 상업적 색채를 띠어왔다. 1980년대 초반 「원조」와 「ODA」는 상업적 동기와 원조를 보다 광범하게 인도주의, 상호의존, 안전보장의 각 측면에서 이용하는 것과 그들사이에서 구별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억 달러 환류조치와 「경제협력」이라는 옛 개념에서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타정부 자금 및 민간자금(예를들면, 민간금융기관, 자본시장, 일본수출입은행)을 중시하면서 정부, 그 타

정부 및 민간의 자금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원조정책에 관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을 애매하게 한다. 이것은 일본이 과거 1세기에 걸쳐 발전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이러한 어프로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총합적 경제원조」 혹은 「총합적 경제협력」이다. 이전개념인 경제협력과 총합적 경제원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총합적 경제원조」라는 것은 보다 넓은 외교목적에 이용 가능한 국가자원을 실제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좁은 상업적 이익의 구속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일본정부는 보다 광범하게 외교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민간부문의 흑자를 줄이고, 당근으로서 원조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흑자는 민간부문의 수중에 있고, 一方 국가예산은 적자이다. 일본정부는 채무에 있어서 제3세계에 돈을 내게 하는 일, 즉 일본의 민간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과제이다.

페르시아만의 사례와 같이 「총합적 원조」 환류조치에는 많은 대상이 있고, 서방제국(과 은행), 제3세계 채무제국 및 국제개발 금융기관의 각 이익, 그리고 국제경제 시스템 전체의 지불능력이 그곳에 포함된다.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 공백상태에 발을 담그고 심각한 채무위기의 해결을 모색하는 제1실이며, 경제적, 금융적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일에 의하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군사적 대국으로서 채무위기는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총합적 경제원조는 상업적 이익을 초과한 광범한 외교목적에 있다. 이것은 옛 「경제협력」 개념이었다. 「에코노믹·에니탈리즘」이 아니고, 다른 「국제국가」의 원조정책의 전개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원조정책의 「일반성과 중요성이 다른 다양한 목표와 대상」의 몇 개가 존재할 것 같다. 전후의 평화주의와 이상주의, 프라그마티즘과 현실주의, 새롭게 태어나는 소망과 희망적인 관측이 일로 되어서 존재할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래와는 달리 피원조국의 인권문제 등 정치·민주화상황, 군사적 목적 전용가능성, 대량파괴무기 생산·이전실태 등을 고려하여 ODA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침으로 선회 「ODA 4원칙」을¹¹⁾ 발표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핵실험 재개('95.5)에 대한 항의로 유무상 원조를 동결하는 등 원조를 군사문제와 연계시키는 외교무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1995년 두 번에 걸친 중국핵실험에 대해 일본은 원조의 외교무기화로 원조를 동결시킨 것을 틀림없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와 군사연계된 원조의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당시 핵실험 때문에 동결한 원조는 전체대중원조의 6%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¹²⁾ODA정책은 자원공급원·공산품시장 확보를 위한 「通商武器化」 전략에서 진일보하여 원조 대상국의 군비증강을 견제하고 지역경제개발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외교·안보 무기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이당시 원조정책은 ODA 관련 부서의 체제정비 등을 통해 원조의 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일본의 ODA 원조체계는 다수의 관계부처 및 실시기관이 각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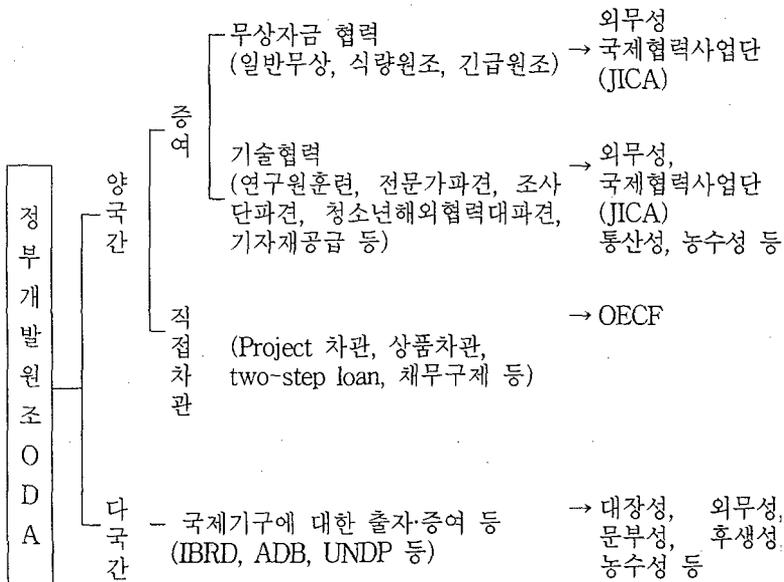
11) 일본정부는 1991년 4월 ①군사지출 ②핵병기 등 대량파괴무기 불확산의 대응 ③무기수출 ④민주화 및 기본적인권의 4가지를 ODA원조액 결정의 참고로 하는 「ODA4원칙」을 발표하였다. 鈴木宗男, 「世界が変わる 日本が変わる」(東京: 講談社, 1992), p.83. 한편 원조 4원칙의 발표는 지금까지 '원칙없는 원조', '일본의 기업과 국익만을 고려한 원조'로서 비판받아온 '얼굴 없는 원조'에서 인권, 민주화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12) 高林義久, "ODA一兆千億円の效用を問う: 戦略なき政府開発援助排せ," 「正論」1997년 2월. pp. 80-81.

소관업무에 따라 원조계획을 분담하고 실시하는 분권적 援助機關型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능이 다른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되고 있다. 원조실시기관은 특수법인형태로 서로 다른 행정관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은 무상협력을 수행하는 국제사업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유상협력(개발원조차관)을 실시하는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이 있다.

일본의 ODA 실시체계를 보면, 유상자금협력은 경제기획청, 외무성, 대장성, 통상산업성 등 4省廳間의 협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F이 사업실시기관으로 2국간 차관을 전담하고 있다.

<도표 1> 일본의 ODA의 지원형태와 담당기관



무상자금협력은 예산당국인 대장성과 협의를 거쳐 외무성이 JICA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고, 기술협력은 외무성과 JICA를 중심으로 주로 실시되나, 내용과 대상이 다양화되어 여러 부처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일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다국간 협력의 경우 외무성이 국제기구(UN 등)에 대한 분담 및 증여율, 대장성이 국제개발금융기관(IMF,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담당한다.

OECF(해외경제협력기금)는 해외지역 산업개발 또는 경제안정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된 「동남아 개발협력기금」을 승계하여 1961년 3월 정식 발족되었다. 정식출범 이전에는 1958년 7월 제정된 「경제기반강화법」에 의해 일본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으로 「동남아개발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ODA를 제공하는 것은 일본이 활동하기 쉬운 정치·경제 시스템을 제3세계에 만들어 효과를 얻으려한다는 假設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일본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세계에 확산되어 일본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쉬운 장소를 늘여가는 것이 일본의 이익되고, 또 그러한 세계는 일본의 대국으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ODA제공액의 급속한 증대를 통해서 세계경제의 번영과 국제안전보장에 공헌하는 동시에 세계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ODA대장의 4원칙에서는 탈냉전이후 일본의 원조 목적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된다. 1986년 필리핀 원조의 경우 일본은 신정권인 아키노정부를 지원하기위해 상당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민주화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얀마에서 198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에 대해 일본은 원조를 동결하였고, 이조치는 미얀마의 민주

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제공한 중국의 엔차관도 일본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민주화지원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의 이행 원칙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1989년 천안문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에 대해 민주화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서방세계에 동참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건 직후 조용히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자 대중원조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1990년에 들어와 미·중관계의 개선 움직임과 북경의 제엄령 해제를 계기로 전환되게 되었다. 즉 정부 내에서 대중 제재조치의 해제가 검토됨과 동시에 자민당에서도 다케시다 前수상을 중심으로 대중관계의 개선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일본정부는 대중원조의 재개를 표명하였다. 일본은 대중원조의 논리로서 민주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90년 후반과 1991년에 각각 1,200억 엔의 엔차관이 제공되었다.¹³⁾ 필리핀(1986)원조, 미얀마 경우도 미국의 정책에 옹한 일본의 원조 즉 일본의 전략원조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96년말 241兆엔)를 2003년까지 GDP 3%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간 성역시해 왔던 안보·외교관계 예산도 삭감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13) 稲田十日, “日本の援助外交: 民主化・市場經濟化支援の理念,” 草野厚・梅本哲也編, 「現代日本外交の分析」(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pp. 160~161. 천안문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외교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는 정치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계획 아래 1998년도 ODA 예산을 전년대비 10%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하시모토총리가 밝혔으며, 실제로 1997년 9월 19일 의무성이 발표한 ODA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10%가 감소한 1조 517억 엔이었다.¹⁴⁾ 원조 성과가 미미한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원조대상국의 국가경제 발전에 증추가 되는 지역개발 계획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도함으로써 개도국 경제운영에 대한 관여폭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역내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비롯 국제사회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오부치」 내각이 목표로 추진중인 중앙부처 재편과정에서 ODA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특정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적이고 일관된 원조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첫사업인 메콩델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투입함으로써 역내 지도국으로서 입지 제고의 방편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4) 「朝日新聞」, 1997. 9. 20.

III. 사례연구

본연구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외원조정책을 추구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냉전기의 일본의 대한국 원조의 경우(1965)와 일본의 대필리핀 원조의 경우(1983~1988), 그리고 탈냉전기의 일본의 대미얀마 원조의 경우(1988~1991)이다.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重點원조대상국」이었으며 19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ASEAN의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다음의 원조액이 큰 국가였다. 1978년부터 타이의 원조액이 필리핀의 원조액을 상회하였으나, 1986년 아키노정권의 성립되면서 對필리핀 원조액은 급증하였으며, 1987년 이후의 對필리핀 원조는 인도네시아, 타이와 비슷한 규모의 원조가 제공되었다.

일본의 對比원조에 대하여, 1983년 아키노氏 암살이후 혼미하는 정치정세속에서, 원조에 대한 정치모체가 제기 되었다. 마르코스정권하의 제12차 및 제13차 엔차관은 「政治性」이 모체가 되었으며, 또한 在比美軍기지문제와 연결된 「전략원조」에 대해서도 일본국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¹⁵⁾ 일본의 對比원조에 대해서는 긴밀한 美日협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당시 일본의 對比원조는 전략적·정치적 원조의 형태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를 사례연구과제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가 경제잠재력이 크고 지리적(地理的)으로도 ASEAN국가와 인접하여 일본의 가공수출기지(加工輸出基地)로서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

15) 第101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 15-27 및 第101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20-9. 「朝日新聞」(1984. 4. 2 및 1984. 11. 9.)

본은 엔 차관(借款) 등 ODA를 적극 활용, 정부 차원(次元)의 협력 관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부차원의 협력관계의 구축기반으로 이를 민간기업(民間企業)의 건설공사(建設工事) 수주(受注) 현지(現地) 업체(業體)와의 합작(合作), 금융기관 진출 등과 연계시키려 할 것이다. 일본은 ASEAN과 공동으로 미얀마와 인도차이나 3국이 시장경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⁶⁾

1. 냉전기

가. 일본의 대 한국원조의 경우 : 1965

일본의 원조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미·일관계가 일본의 원조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¹⁷⁾ 다시 말해서, 동서냉전이 심각한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원조가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일익(一翼)을 담당할 정도였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1960년대 중반이후의 사토(左藤)내각에 동남아시아, 극동에 대한 원조의 적극화라고 보여진다.

16) 일본과 ASEAN은 1996년 9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경제관련회의에서 미얀마, 베트남, 캄보니아, 라오스 등 시장경제체제(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4개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法律) 및 회계제도(會計制度)의 정비(整備)와 국유기업(國有企業)의 민영화(民營化),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확충(擴充) 등 7개 분야를 설정, 각 분야의 간사국(幹事國)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경제화(市場經濟化) 추진과정(推進過程) 전반(全般)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이들 4개국의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확충(擴充)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주도하에 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17) *Takashi Inoguchi, "Japan's Images and Options : Not a chllenger, But a Supporter, "Journal of Japanese Studies (winter 1986), pp.95-119*

그 유인(誘因)이 된 것은 베트남전쟁이다. 1964년의 통킹만사건, 1965년의 북폭에 의한 베트남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였다. 통킹만사건후에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의 번디국무차관보는 강연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침투공작등 외부에서의 압력이 커지면 남베트남이외의 지역에 전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사토수상은 “일본은 남베트남 對 베트콩전에 대해서 정신적 지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싶다”고 언급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이 추이가 일본이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것 같은 인식으로 비춰졌다.¹⁸⁾

미국이 일본에 거는 기대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1950년대 말부터 달러위기를 겪은 미국은 대외원조를 제공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예산편성¹⁹⁾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예를 들어, 케네디 정권에 의한 국제개발청(AID)예산의 1963회계년도 요청액 32억 8100만 달러는 의회에 의하여 22% 삭감되어 승인예산액은 25억7400만 달러가 되었고, 존슨정권하 의회의 원조예산은 1964회계년도에서 31억2500만 달러를 요청하였으나, 승인액은 36%가 삭감되어 20억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2국간 원조에도 반영되었다. 미국의 대한 국원조는 1957년의 3억8200만 달러를 피크로하여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에 2억1500만 달러, 61년에는 1억9900만 달러, 62년, 63년에는 2억달러의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64년에는 1억2700만 달러까지 급감하였다.²⁰⁾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군사적인 협력은 할 수 없으므로

18) 「朝日新聞」(1965. 1. 5.)

19) 田中義晴, 「援助という外敎戰略」(東京: 朝日選書536, 1995), p.128

20) 田中義晴, 앞의글, p.129.

경제원조로 미국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극동, 동남아시아제국의 원조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일교섭은 활발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한·미·일 3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1964년 10월에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팽창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미국은 월남전의 확전에 따라 세계여론에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1960년 초에는 이미 서구와 일본의 대외준비고는 미국과 맞먹는 것이 되었고, 반면에 미국의 금보유고는 1948년의 244억달러에서 1959년 말에는 195억달러로 감소하여 미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소위 Triffin Dilemma²¹⁾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으로 정치적(위협세력) 그리고 심리적(핵알레르기반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자민당내에서는 1964년 기시(岸), 사또(左藤), 이시이(石井) 등이 주도하여 아시아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안보노선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한국, 자유중국,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케다(池田) 수상은 국민소득 배증정책에 의한 고도성장기를 통하여 과잉투자과 구조적 불황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시장이 요구되었다.

한국의 민주당정권은, 6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원조가 2억

21) Robert Triffin, *Gold and Dollar Crisis :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61) pp.3-14. 만약에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세계금융준비의 원천 달러가 고갈되어, 유동성의 부족으로 국제거래가 침체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수지적자정책을 계속 시행할 경우 미국의 금재고량을 초과하는 달러의 해외과잉보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과 달러의 위기를 동시에 몰고 온다는 것이 Triffin Dilemma이다.

달러를 넘지 못하고 감소하자, 경제개발을 위해 대일 청구권자금과 일본자본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60년도의 상황적 변화에 의하여 한·일회담은 한·미·일 3국의 이해일치를 나타낸 시기라고 볼 수 있다.²²⁾

4·19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은 장면내각이 들어서자마자 1960년 5월에 이계다정권과 제5차회담을 재개하였다. 한·일양국은 필요에 의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제별 회의를 전개하였고 한국은 청구권자금으로 6억달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은 5·16혁명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 이듬해에 군사혁명정부는 정통성의 획득을 위해서 근대화작업의 핵심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자본과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10월 박정희정권은 제6차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1962년 2월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을 방문해서 정치협상을 개시하였고 그 해 9월 한·일기본조약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김·오히라(大平)메모에 합의하였다.

1965년 6월22일, 일본과 한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을 위해 일본은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달러, 유상(정부차관)2억달러 그리고 민간상업차관 1억달러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무역은 1965년의 2억 2000만달러에서 1979년에는 10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1965-79) 한국은 11억 3000만 달러의 공공차관과 14억 2000만 달러의 상업차관 그리고 6억달러의 직접투자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다.²³⁾ 이렇게

22) 김영춘, "수교협정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7), pp.78-87.

23) 山本講士, "日韓關係の位相," 『世界』 (1981.4), p.208.

일본자본을 매개로 한 기계 및 부품의 공급, 원자재의 공급과 기술의 지배는 무역의 역조를 심화시켰고 대일의존적인 경제구조가 되었다.

1951년부터 14년간 계속된 한·일교섭의 독도문제, 어업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 등이 타결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아시아의 공산세력에 대한 자유진영내의 결속을 강화하고 싶은 미국의 의도가 한국과 일본정부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박정희정권으로서도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의 원조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일본의 對필리핀 원조의 경우(1983~1988年)

일본의 對比원조는 1956년의 전후배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1969년의 日·比 우호도로계획에 대한 차관, 1971년의 제1차 엔치관부터 매년 차관을 제공하였다. 배상은 1977년이 되어서야 끝났지만, 일본의 對比원조는 70년대이후 다소의 증액, 혹은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에 대한 그 국간원조의 제1위의 원조제공국은 일본이었고, 71~88년의 累計에 의하면 일본이 52.8%를 점했고, 다음은 미국이 31.5%를 점하고 있어, 양국의 원조는 84%를 보이고 있다.²⁴⁾

여기서는 특히 1984년의 마르코스정권 말기 이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시기의 일본의 對比원조의 경위를 ①마르코스정권말기(제12차 차관), ②아키노정권 성립시(제13,14차 차관), ③아키노정권성립후(제

24) 稻田十日, "ODA 日本外交," 五十嵐武士編, 「日本のODAと國際秩序」(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pp.58~59.

15차 차관, 다국간원조구상)의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마르코스정권말기(제12차 차관)

필리핀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유상협력·무상원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1984년 4월, 제12차 엔차관(1983년도분 차관) 425억엔이 제공되었다. 또 同 4월에 10억 2000만엔의 무상원조가 書翰交換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키노氏 암살후의 필리핀의 정치·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본의 엔차관 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위하에서 이루어졌다.

1983년 8월 아키노氏가 암살된 직후, 정치불안 때문에 필리핀의 자본유출이 가속되었고, 채무누적문제가 급속하게 顯在化되었다. 따라서, 10월에는 대외채무의 모라토리움이 선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同年 9月, 비라다 수상이 방일하여 나카소네 수상에게 금원지원(특히 상품차관)을 요청하였다.²⁵⁾

11월에는 미·일 수뇌회담이 열려, 미·일이 협력하여 필리핀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²⁶⁾ 1984년 3월이 되어서는, 미·일 쌍방의 필리핀 지원의 具體策이 내정되었다.

그것은 일본측이 엔차관 425억엔을 조기제공하고 미국측이 원조를 5할 늘이고, 미·일 쌍방도 5억달러씩 협조유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²⁷⁾ 1984년 4월 27일 일본閣議에서 결정된 엔차관 425억엔(상품차관 325억엔), 4월28일에는 書翰이 교환되었다. 5월7일, 해외경제협력기금과 필리핀정부와의 사이에 차관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5월14

25) 「毎日新聞」(1983. 9. 9)

26) 「日本經濟新聞」(1983. 11. 11)

27) 「毎日新聞」(1984. 3. 14)

일, 국민의회선거가 행하여졌고 그결과 마르코스정권은 존속하게 되었다.

이 엔차관의 제공경위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원조를 제공받기 위하여 즉 정치·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구제지원을 기도하였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필리핀의 政情불안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님 比美軍기지에 대한 反對等이 나타날까봐, 그 존재가 불안정화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실, 미국의회는 필리핀 문제가 크게 취급되어 在比美軍기지의 利權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보여진다.²⁸⁾

한편, 일본은 그러한 정치적 요소를 감지하면서, 필리핀의 외화부족에 의한, 원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 日系기업 중에는 操業정지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필리핀 경제의 구제는 급선무였다. 1984년 당시,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家電, 자동차, 섬유 등 700社가 있었다.²⁹⁾

정치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와의 무게를 두는 시각의 차이는 있으나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미·일의 입장이 일치하였고, 민간레벨 정부레벨에서 적극적으로 미·일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선거결과 마르코스정권은 유지되었고, 美·日금융지원에 의하여 필리핀경제는 一時 진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꼭 일본원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치·경제위기 구제라는 것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일본이 필리핀에 대해 신속한 원조를

28) Alva M. Bowen, Philippines Bases : U. S. Deployment Options, Feb. 20, 1986. 번역도 되었다. 美議會調査局報告書 “スピック・クラーク兩基地失ったら,” 「世界週報」(1986. 4. 15), pp. 50-61.

29) 「毎日新聞」(1984. 2. 2)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워트웨이즈 국무차관보는 미·일의 정책조정 의 진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였다.³⁰⁾

(2) 마르코스정권 ~ 아키노정권(제13,14차 차관) 1985~1987

1984년 5월의 선거후, 필리핀의 정치·경제정세는 안정의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에서 마르코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크게 일어났으며, 또 필리핀국내에서도 NPA(新人民軍)의 세력이 확산되는 등 마르코스 정권은 점점 동요하였다.

12차 엔차관에 이어서, 1985년 12월23일, 필리핀에 대한 제13차 엔차관 495억엔(프로젝트차관 330억엔, 상품차관 165억엔)의 書翰이 교환되어졌고, 필리핀의 정세혼란에 의해서 이차관의 제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마르코스정권이 불안정한 가운데 1986년 2월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선거 때문에 필리핀 국내의 대통령파와 반체제파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정치정세는 혼란해졌기 때문에, 86년 2월13일 OECF(해외경제협력기금)는, 예정된 제13차 엔차관內的 프로젝트차관 330억엔分の 조인을 연기하였고³¹⁾, 또 2월19일에는 나머지 165억엔의 상품차관에 대해서도 당분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³²⁾ 2월25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혼란직후 아키노정권이 발족한 다음날 즉 26일, 일본 정부는 제13차 엔차관에 대하여, 신정권의 요망을 들은 후 원조증액을 포함한 對比차관 제공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³³⁾

30) 「アナリカ政策シリーズ・67」, 美國大使館廣報·文化局, 1984.8.24. p.23.

31) 「讀賣新聞」, (1986. 2. 13)

32) 「日本經濟新聞」, (1986. 2. 19)

33) 「日本經濟新聞」, (1986. 2. 27)

제13차 엔차관의 11프로젝트 가운데, 日比우호도로계획 등 4件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4월 22일에 7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먼저 원조를 실시하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르코스자산 의혹을 둘러싼 논의가 일단락되는 것을 기다려서, 5월 31일에 7건의 프로젝트 166억엔을 貸付계약이 조인되었다. 남은 4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월 26일 필리핀에서 상품차관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6월말 安倍·아키노회담에서 상품차관의 변경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11월 13일, 해외경제협력기금 제13차 엔차관內에서, 당초부터 있었던 상품차관 165억엔 참가해서 4건의 프로젝트分 164억엔, 계 329억엔의 상품차관계약에 조인하였다.³⁴⁾

6월 4일, 방일한 라우렐 부통령으로부터 제14차 엔차관의 실시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10월 19일, 필리핀 외무청을 통해서 프로젝트차관 500억엔, 상품차관 800억엔, 계 1300억엔이라는 거액의 원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대응에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키노정권의 지원강화라는 관찰 때문에, 11월 11일, 방일한 아키노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404억엔의 특별차관의 원조를 표명하였고, 또 제14차 엔차관에 대한 작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³⁵⁾

1986년말, 三井물산의 若王子氏 유괴사건이 발생하여 경제원조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사건도 87년 3월하순에는 해결되어서, 제14차 엔차관에 대한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4월 13일 제14차 엔차관을 700억엔 정도로 하는 방침이 세워졌지만, 최종적으로는 802억엔³⁶⁾에 도달했으며, 이것보다 404억엔의 특별차관과

34) 「日本經濟新聞」(1986. 11. 13)

35) 「朝日新聞」(1986. 11. 11)

36) 「讀賣新聞」(1986. 12. 16)

합쳐서 對比차관은 약 1200억엔에 육박하였다.

제13차, 14차 엔차관의 제공에 관해서는 미·일간의 빈번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아키노정권 탄생후의 1986년 3월6일 와싱턴에서 제2회 미·일 정무 장관급회의(85년의 미·일수뇌회담으로 개최가 합의되어 제1회는 同年 3월23일 열렸다)가 열려 필리핀의 안정을 위해 미·일양국이 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³⁷⁾ 4월5일에는 와인버거 美國 무장관이 동경을 방문하며 아베(安部)외상과 회담하였는데, 주제는 필리핀의 정세에 대한 협의였다.³⁸⁾ 즉 일본이 對比경제지원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마르코스정권과는 달리 아키노정권에 대해서는 원조에 적극성을 보였다. 1986년 5월9일 솔츠·아키노회담에서, 미국은 약 2억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하는 약속을 하였고, 86회계연도에서는 2.4억달러(경제원조 1.88억달러, 군사원조 0.52억달러)의 원조예산을 세웠으며, 또 87년도에는 경제·군사원조를 합쳐 5.56억달러를 지출하려고 歲出法案을 제출하였다.³⁹⁾

마르코스정권에서 아키노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가운데, 일본정부의 필리핀정부에 대한 자세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12차 엔차관을 제공할때와 마찬가지로, 마르코스정권말기의 제13차 엔차관에 대해서도 일본의 對比원조가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야당·메스콤·필리핀의 반체제파 사이에 강화되었다⁴⁰⁾. 그러나 일본의 경제원조의 경위를 분석해 보면 1985년말의 제13차 엔차관이 제공될때는 불안정

37) 「日本經濟新聞」(1986. 3. 7)

38) 「毎日新聞」(1986. 4. 6)

39) 「東南アジア月報」(1986. 8월호), p.35

40) 「毎日新聞」(1986. 10. 11)

한 필리핀 政情속에서, 원조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동결되는 극히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의 對比원조총액은 마르코스정권말기보다 그리 증가하지 않았고, 1986년 2월 26일 아키노정권이 탄생했을때 일본은 아키노정권의 지지입장을 보였으며 이후 對比원조는 급증하였다.

(3) 아키노정권하 (제15차 차관과 다국간원조구상) 1988년

1988년은 미국과 필리핀사이에 있었던 在比미군기지 교섭 때문에 일본의 對필리핀원조는 제13차 엔차관이 495억엔이었던것에 대해 제14차 엔차관은 802억엔으로 약 62%증가하였고 87년 12월 다케시다 수상이 필리핀을 방문했을때는 年次엔차관과 별도로 약 140억엔의 엔차관 제공의 의도는 표명하지 않고 다음해인 1988년 4월12일에 書翰교환을 하며, 동시에 총액 43.5억엔의 무상자금협력의 書翰이 교환되었다.

제15차 엔차관에 대해서는, 1988년 10월 7일 필리핀측이 총액 1,100억엔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위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10월16일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美比二國 간에 계속된 美比기지협정의 새로운 교섭이 합의되었다(미국은 필리핀에 군사·경제원조의 제공액을 연간 1억 8,000만달러에서 4억 8,100만달러로 증액한다). 이 교섭이 타결된 후, 일본의 對比원조제공도 급속히 행해져 10월17일, 4省廳의 담당자를 중심멤버로 해서 필리핀에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필리핀 측 관계자와 최종적인 희망 프로젝트를 확인하였다.⁴¹⁾

41) 「讀賣新聞」(1988. 10. 18)

따라서 12월1일 제15차 엔차관으로서 총액 885억엔이 제공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필리핀정부에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것은 14차 엔차관을 약 10% 상회하는 금액으로 日比간의 경제협력의 확충과 동남아시아 안정을 둘러싼 미국의 중시였고 또한 아키노정권의 지원을 확실히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차 엔차관의 제공액·내용의 결정과 병행해서, 對比원조문제의 하나의 초점으로서, 對比多國幹援助構想(multilateral Aid onitiatre for the philippimes)의 구체화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對比다국간 원조구상은 미국의 實案에 의한 원조구상으로서, 당초의 원조계획의 골자는 ①규모는 1990년부터 5년간 총액 100억달러, ②일본과 미국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여기에 미국정부, 상업은행,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유럽의 諸國이 참여한다.42)

이 구상은 87년 11월 미국의회의 의원이 대통령에게 「對比미니·마샬·프랜」의 검토를 요청한 것에 기초하여, 88년 3월, 대통령이 同프랜의 검토를 지시, 4월, 시켈국무장관보가 일본, 서독 등을 방문해서 협력을 요청하였다.43)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상 역할분담 증대의 일환으로서, 다국간원조구상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88년 6월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對필리핀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원조의 증대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원조계획과 在比미군 기지문제를 연계시키는데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44) 또 아세안제국 이외의 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이계획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였으며, 선진국들 가운데도 프랑스·캐나다 등은

42) 「讀賣新聞」, (1988. 10. 31)

43) 「讀賣新聞」, (1988. 5. 9)

44) 「讀賣新聞」, (1988. 7. 3)

同구상의 지지를 포명하고 있으나 영국 등은 당초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⁴⁵⁾

일본정부는 필리핀의 안정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아키노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對比원조의 확대자체를 찬성하면서도, 원조가 미국주도로 전략적색채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였는데 이는 美·比 기지 협정의 새로운 교섭 때문이었다.

1988년 7월말, 일본은 외무성간부를 美·比양국에 파견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으며, 8월 15일에 제1회 실무자협의를 11월 15일에 2회의 실무자협의를 열었다. 특히 89년 2월 외무성간부가 訪比하여 필리핀 측과 협의, 4월 17일에는 동경에서 日比 양정부의 실무자 협의가 열려 기본골격을 만들었다. 7월 3~5일에는 동경에서 對필리핀 확대원조국회합이 열려, 각참가국·기관에 의한 89년도 원조제공액은 35억 달러를 정했으며, 일본은 89년도분으로 약 10억달러의 ODA를 제공하기로 하였다.⁴⁶⁾

그러면 在比美軍기지교섭과 일본의 원조 및 다국간원조구상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미국은 양호한 2국간관계의 유지(즉 기지교섭의 원활한 진전)와 對필리핀원조를 연결하여 필리핀측과의 기지교섭에 임하였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지문제와 원조문제를 연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러나, 美·日간에 對比원조에 대한 밀접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예를 들어 1988년 7월 16일에는 슬츠美국무장관이 필리핀 방문하는 길에 일본에 들러 우노(宇野)외상과 對比원조계획에 대해서 회담하였으며, 또 對比원조

45) 「朝日新聞」(1988. 3. 16)

46) 「對 フィリピン 擴大援助國會合」, 國際協力特別情報(Vol. 15, NO. 15), 1989. 8. 1.

에 대해 미·일 협의기관의 설치를 합의하였다.

실제로, 일본은 제15차 對比 엔차관의 제공과 다국간원조구상의 구체화는 1988년 10월의 美比기지 교섭의 합의를 기다렸다가 보고 급속히 진전하였으며, 美比교섭이 일본의 對比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조계획이 美比교섭에 사실상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진다.⁴⁷⁾

일본의 ODA에 관한 論議와 政策레벨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實施레벨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本論의 주제는 政策레벨의 문제인 필리핀의 원조케이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일본의 對比원조에 대해서는 필리핀 경제의 구제가 필리핀의 정치적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그것은 동남아시아전체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公式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결정자의 사이에 對比원조의 의미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외교적 관점에서, 일본의 對比원조의 강화는 서방 자유주의진영의 一員으로서 일본의 공헌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對美협조의 수단이 된다. 외무성은 이러한 對比원조의 의미를 중요시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日比경제관계는 사실상 상당히 긴밀하므로, 필리핀경제의 파탄의 필리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은행에서 볼 때 중요하고, 필리핀경제의 구제는 일본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경제계 뿐만 아니라, 통산성·대장성도 갖고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在比美軍의 존재는 미국의 아시아에 있어서 對소전략에 매우 중요하며, 필리핀주변을 일본의 Sea Lane 확보에 있어서 즉 일본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을

47) 鈴木靜夫, 「對フィリピン多國間援助計劃 と 同國の 政治動向」(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8), pp.1~5.

군사전문가·방위청이 갖고 있다(방위청은 원조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對比원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다시말해서, 일본의 對比원조의 배후의 고려는, 크게 나누어 2가지 사고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그것이 해외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경제이익론」(혹은 경제·금융면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경제적 역할론」)이다. 둘째는 필리핀정부의 안정을 미·일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것에서 처럼 외교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정치협력론」이다.

「경제이익론」도 「정치협력론」도 모두 「理念型」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일본의 對比원조에 있어서 양자는 중첩되어 있다. 「경제이익론」은 통산성, 대장성 및 경제계의 시각이며, 「정치협력론」은 외무성의 주된 시각이지만, 양시각은 일본전체로 보면 병존하는 시각이다.

美·日역할분담의 시각은 필리핀의 경우, 군사적·외교적 관점과 경제·금융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 군사적·외교적관점에서 일본의 對比원조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일본의 對比원조는 在比美軍 기지의 존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또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 경제·금융관점에서 일본의 對比원조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일본의 원조는 필리핀의 경제·금융위기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원, 즉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다.

2. 탈냉전기

가. 일본의 대미얀마 원조의 경우 : 1988~1991

일본은 1954년 11월 미얀마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피해 보상명목으로 일시불로 2억 달러를 미얀마에 무상지원하였고 엔 차관으로 5,0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미국이 대미얀마 경제재제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1991년 7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규모 또한 미얀마에 대한 총지원금의 70~80%를 차지하였다.⁴⁸⁾

일본은 1988년 네원정권이 붕괴되고 SLORC(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군사정부가 들어설 때 지지 미얀마에 제1의 원조국으로서 유·무,상(有·無,償)의 각종자금을 지원해 왔다. 일본이 1954년 이래 1986년까지 미얀마에 제공한 유·무,상(有·無,償)의 각종 원조는 총 6,328억 엔 규모에 이른다. 이중 무상협력(無償協力)은 4,030억엔에 이른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미얀마에 매년 약 500억엔의 자금을 제공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400억 엔은 장기(長期)저리(低利)의 정부차관이었고, 1백억 엔은 순수 무상수조(無償援助)였다.⁴⁹⁾

일본의 무상자금은 배상(賠償)과 준배상(準賠償) 및 통상의 무상 지원으로 분류되어 지원되었다. 배상(賠償)의 성격으로 지원된 금액은 1955년 4월부터 1965년 4월까지 약 10년간 720억 엔이며, 주로 바르창 발전소 건설(104억 엔), 4개(경차량제조, 중차량제조, 중

48) 정재완, 「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 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12) pp.147~148.

49) 앞의글, p.148.

기구 제조, 전기기기 제조) 공업화(工業化)프로젝트 지원(105억 엔), 농기계와 운송용 기계구입 등에 투입되었다. 통상(通常)의 무상협력(無償協力)은 1975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 실시하였는데, 일반무상협력(一般無償協力)으로 603억 엔과 식량증산수조(食糧增産援助)로 236억 엔을 지원하였다.⁵⁰⁾

일본은 또 외채지불 불능상태에 빠진 미얀마가 1987년 12월 UN 으로부터 '최빈국'(最貧國)으로 공식지원받자, 그동안 미상환 상태에 있던 차관에 대해 부채 탕감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은 1988년 6월과 199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탕감(債務蕩減)을 실시하였고, 1991년 이후에는 매년 2~3차례씩 각각 2,000만 엔에서 4,000만 엔 규모의 말상환(未償還) 차관(借款)을 사실상 소멸시켜주고 있다.

일본의 유상협력(円 借款,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은 1969년 2월부터 1987년 9월까지 18차에 걸쳐 66건, 총 4,030억 엔이 지원되었다. OECF의 경우 금리는 1976년까지는 연리 3%였으나 1977년 이후부터는 2%였고, 상환기간은 25년 내지 30년 이었다. 주요 대상 프로젝트로는 공업,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등이었다. 그외 도자기 제조공장, 시멘트 공장 확장, 정미소 건설, 사탕공장 확장, 제강공장 보수 등에 지원되었다.⁵¹⁾

일본의 또 미얀마에 대한 OECF은 상품차관인 34.9%인 1,406억 1,000만 엔이며, 나머지 65.1%는 프로젝트 차관이다. 부문별(部門別)로는 광공업(鑛工業)이 18건에 1,323억 400만 엔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였으며, 운수업(運輸業) 부문이 10건, 526억 6,700만 엔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후의 신규차관(新規借款)은 증지하여 왔다.⁵²⁾

50) 앞의글, p.149.

51) <표> 참조

<표 1> 일본의 연도별 대 미얀마 ODA지원실적(1995년까지)
(지출순액, 단위: 백만 달러)

	증 여			정부대출		합 계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계	지출총액	지출순액	
1990	30.18(49)	3.16(5)	33.34(54)	27.98	27.98(46)	61.32(100)
1991	37.17(44)	4.59(5)	41.71(49)	42.81	42.81(51)	84.52(100)
1992	31.58(44)	4.98(7)	36.56(51)	35.51	35.51(49)	72.06(100)
1993	35.95(52)	5.77(8)	41.75(61)	26.86	26.86(39)	78.61(100)
1994	99.95(75)	7.37(6)	107.32(80)	26.49	26.49(20)	133.82(100)
1995	139.27(-)	12.16(-)	151.41(-)	15.96	-37.19(-)	114.23(100)
누계	937.43(37)	125.35(5)	947.29(39)	1,623.16	1,507.96(61)	2,563.47(100)

註: 1) ()안은 ODA합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임.

2)누계는 1968년 이후 1995년까지임.

자료: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政府開發援助: ODA白書 下卷(國別援助)」, 1996. 9.

<표 2> 일본의 분야별 대미얀마 OECF 지원현황(~1996. 3.)

分野	건 수 (건)	금 액(백만 円)
상품차관	22	140,610
광 공 업	18	132,304
운 수	10	52,667
전력·가스	7	42,521
농림수산업	4	17,250
관개·치수·간척	3	12,000
통 신	2	5,620
합 계	66	402,972

자료: The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f Japan, OECF Annual Report 1996. 8

반면 일본은 1988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미얀마 군사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미얀마의 정세안정 및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 1989년 2월 군사정부(軍事政府)를 승인하였다. 이에따라 군사쿠테타이후 OECF지원을 일시 동결한 바 있다.

그후 1990년 5월 일본은 기왕에 시작되어 진행중이던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7개 프로젝트사업(발전소 건설, 철도 근대화, 관개사업, 설탕공장사업 등)을 재개하였다가, 1991년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經濟制裁措置)로 인해 중단하고 있다. 동년(同年) 4월, 일본은 수혜국(受惠國)이 정치(政治) 민주화(民主化)와 인권(人權)을 존중해야 일본의 ODA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래 현재까지 미얀마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럽 등과 공동보조하에 수조중단(授助中斷) 조치(措置)를 취해오고 있다. 비정부조직(NGO)을 통한 소규모 무상수조(無償授助)만 실시해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4년 11월이후 미·미얀마의 관계개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대미얀마 OECF의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10억엔의 무상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1995년 6월 현재 미얀마 정부는 이자금을 토대로 농업생산성(農業生產性) 향상(向上)을 위한 프로젝트(비료, 농기계 구입)를 추진하고 있다. 1995년 6월에는 40억엔의 채무변제차관을 지원키로 하였고, 1996년 5월에는 일본수출입 은행이 수출보험을 2억달러 인수하였다.⁵³⁾

53) 앞의글, p.152.

IV. 북·일수교시 일본의 대북한 원조 및 경제 협력 전망

1. 일본의 대북한 원조정책

북·일 수교교섭 타결전망은 보상문제, 과거사 문제, 관할권 문제, 이은혜 및 납치의혹 문제 등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일본외무성이 1997년 말부터 「국교 정상화 교섭 무조건재개」 방침을 바꾸어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교섭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⁵⁴⁾

북·일 수교교섭의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정세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여 있기 때문에 대북수교가 일보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다.⁵⁵⁾

최대 현안은 보상문제로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시대 북·일관계는 교전관계였으며 북한은 전승국이라는 인식 하에 패전국으로서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민지시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전후 45년간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자행한데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인 조약에 의한 것이며,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인식으로부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전후보

54) 重村智計, “日・北國交正常化の展望,” 「한·일워크샵: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관계 전망」(1998. 8. 28. 민족통일연구원), p.4.

55) “북한과 수교해도 달가울 것이 없다. 난민이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이 합법적으로 일본에 몰려오면 그야말로 큰일”이라고 일본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중앙일보」(1997. 2. 7)

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식민지시기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재산·청구권 방식으로 최소한의 보상만을 하려 하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사회·자민·사키가케) 방문단은 1995년 3월 30일 북한 노동당과 북·일수교 교섭재개를 합의하였는데 이는 90년 자민·사회·노동당에 의한 3당 공동선언에 명기한 「일본이 한국과만 국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이 본 피해도 보상한다」는 이른바 전 후보상문제는 의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⁵⁶⁾

일본측은 북·일 수교교섭을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일 수교교섭에서 보상문제를 재산·청구권 문제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⁷⁾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얻어 내는 수준에서 만족하느냐이다. 사실 ‘청구권방식’이나 ‘보상방식’이라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명분보다 실리가 크다면 명분은 또 다른 명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한·일회담에서도 실리가 우선했고, 일본이 제공할 보상액수를 둘러싼 협상이 가장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북한측이 조기 국교수립을 제안한 최대 이유가 보상금 획득에 있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북·일 양국은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⁵⁸⁾

56) 「讀賣新聞」(1995. 3. 30)

57) 1991년 1월 25일 일본정부는 교섭에 임하는 4가지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첫째, 교섭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북·일국교정상화가 한·일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일본의 식민지통치 36년간에 대해서는 청구권문제로서 성실히 대처하나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은 수용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朝日新聞」(1991. 1. 26)

58) 1992년 2월 9일자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한국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과 북한이 배상금 규모를 80억 달러 선으로 한다는데 거의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1992. 2. 9). 이는 5년

미국과 한국은 북·일수교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이 국교정상화 이전에 경제협력·배상은 하지 않을 것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진전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 대북경제협력이라도 한국에의 '배상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모든 것도 일본의 대북압력수단으로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⁵⁹⁾

미·일동맹체제가 유지되는한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국가위상이 제고되면서 즉 Power가 증대되면서 일본의 대외원조정책과 미국의 외교전략과 어떠한 관계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일본원조가 정치적·전략적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8년부터 ODA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ODA 제1차 중기목표(3개년 배증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당시는 정경분리 원칙하의 일본 ODA의 정치적 차원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였고, 일본은 경제적인 국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본은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원조를 동결하였다. 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항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다.⁶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수교협상 타결시 금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교덕, "한·일 회담에 비추어본 북·일 수교협상," 『통일연구논총』 제4권1호, 1995, pp.180~187.

59) 앞의 글, pp.187~188. 북·일교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것은 첫째, 교섭과정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유도할 것, 둘째,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은 수용하지 말 것, 셋째, 식민통치 36년에 대한 보상도 북한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것, 넷째, 남북대화가 후퇴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 등이었다. 『讀賣新聞』, (1990. 10. 5)

60) Dennis Yasumoto, *The New Multinationalism in Japan's Foreign*

오히라총리가 1979년 분쟁주변국 원조라는 정책아래 타이, 파키스탄, 터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원조를 대폭 증액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고려였다. 스즈키내각은 원조에 대한 전략적논리를 표면적으로 후퇴시키는 대신, 비군사적 수단지지를 안보의 요소로 파악하여 총합안보전략 개념을 채택하여, 전략원조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역에 대한 원조로 파악하였다. 앞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의 마르코스로부터 아키노로의 권력이양, 계엄령 선포 이후 미얀마의 원조중단이 이러한 예이다. 또한 1983년에는 나카소네 수상이 한국의 ‘안보경협’ 요구에 대해 40억 달러의 전략원조 제공을 결정하였다.⁶¹⁾

1989년 일본의 ODA예산은 89억 6,500만달러로 미국의 78억달러를 앞질러 세계 제일의 원조제공국이 되었다. 탈냉전이후시대에 들어서 일본 원조정책은 정치·전략적 측면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2가지 사태와 밀접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1991)등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몰락은 민주주의 승리라는 확신이 일본내에서 풍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원조정책은 정치 및 이데올로기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일본은 과거의 정태이었던 정경분리정책에서 정경일치의 정책으로 ODA정책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ODA정책은 서방(주로 미국) 세계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일본은 냉전종결과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 관계”(도쿄선언, 1992. 1. 9.)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 및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에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ODA의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증가한 750억달러로 책정하였다.

Policy(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5), pp5~6.

61) 한영구, “한국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1990년 5월. pp.60~65.

일본과 북한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보상 규모는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의 양보를 기초로 정치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사정의 절박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북한은 보상 문제를 한·일수교시의 방식에 의거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수교시 보상액수는 양측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추스리면서 한·일기본조약 당시 한국에 제공한 원조(ODA) 무상 3억, 유상차관(엔차관) 2억달러의 연체이자를 감안한 액수(약 40억달러 상당)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소한 1백억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서 양측간에 진통이 예상된다.⁶²⁾ 따라서 일본이 북한과 수교시 제공할 ODA는 약 40억달러에서 약 100억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보상이 현물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인적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이 보상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북한이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면, 이는 장래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³⁾

북·일수교가 성립될 경우 약 8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대일채무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거래도 증가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보상실시 과정에서 일본경제의 대북 침투력이 높아질 것이다.⁶⁴⁾

62) 한·일수교시 일본의 기업이 제공한 상업 차관 1억달러는 일본정부의 ODA가 아니다. 이철기, “북·일관계 개선 어떻게 봐야하나,” 『통일한국』 (1997. 11), p.26. 식민통치배상금은 50억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춘, “최근 북·일접근 움직임과 전망:미국측 행보와 맞추어 수교협상진행,” 『통일한국』 (1996. 8), p.87.

63)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の政府開發援助(上)』, 1996. 10. p.122. 1978년 일본은 엔차관(유상차관)을 무조건화(Untied Loan)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의 자금협력을 행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상대국요청에 의해 결정된다는 소위 요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64) 한영구, 「일·북한 수교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서울:

수교후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의 개발에 참여시킬 것이다. 또한 조총련기업을 앞세워 추진하던 합영 및 위탁가공 사업에 일본기업을 진출시킬 것이다. 북·일수교는 조총련의 대북투자에 대한 정치적 장벽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조총련의 대북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이는 북한경제의 진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2. 일본의 대북한 경제 협력

현재 북한의 국제적 신임도가 낮고 외교,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가 강할만큼, 미중관계개선에서 보듯이 일본과 북한관계도 정치가 선행, 국교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에 경제관계를 촉진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일본은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도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이러한 국면을 실제 맞이할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북·일 경제교류의 추진은 역시 민간기업, 그 가운데서도 종합상사가 주축이 되어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일부 최종소비재와 저급부품의 생산기지로서 북한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역시 국교정상화 교섭시 청구된 형식이든 원조형식이든 양국간 정치협상시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가 수립되면, 청구권 자금과 경제협력자금공여, 대일채무문제의 일괄타결, 무역보험과 수출입 은행 등 공적 자금이용, 특혜관세제

도 활용, 정부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활용, 기타 규제완화 등으로 양국간 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대북 거래에 참여하려는 일본기업도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일본해 인접지방들은 지금까지 환일본해 경제권 개발구상을 마련, 북한의 개혁·개방을 크게 기대해 온 만큼, 지방과의 교류확대, 산업기술협력, 대북 직접진출 등을 통해 지역진흥과 지방국제화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1차적으로 경제특구설치, 두만강유역개발구상⁶⁵⁾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증대, 외화획득으로 대북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기적으로는 동지역 진출에 의해 금후 ASEAN 등에서의 임금비용 증가에 대비, 새로운 저급생산기지로써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환일본해 제국은 특색을 발휘하여 상호보완 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노동력, 비철금속·철광석 등 광물자원, 농산물 공급을 기대하는 한편, 일본은 자본, 인재육성·경영노우하우, 기술, 생산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환일본해경제권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을 포함한 연안제국과의 교류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역내의 전력, 수송, 항만, 공항, 통신 등의 인프라의 정비·확충이다.⁶⁶⁾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북 경제정책의 실행 가능성은 최근 동북아 지역 정치·안보상의 한·미·일 공조체제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사실 일본은 주요한 대북 정책결정과정에서 한·미의 눈치를 살피

65) UNDP의 시사에 의하면 20년간 약 300억 달러가 소요될 본 계획은 환일본해경제권의 상징적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김규륜, 「동북아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2), p.45.

66) 김도형, “일본의 대북한 경제정책,” 「미·소연구」 (제7집 1994), pp. 259~260

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협력과 통일과업을 오히려 우리측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고려하여 우리의 이니셔티브하에서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3. 남북한 경제협력

북·일한 수교후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공은 현재 북한을 체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물론 북한경제 침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노선과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정치·군사 우위의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한 보상 및 경제교류로 단기간내에 북한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공여되는 보상공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북경제협력은 적어도 북한의 재정적 붕괴를 막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시 그 만큼 한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북한 경제가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남한과의 경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는 북한이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험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과의 개방 및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조건으로 일본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북·일 경제교류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범위를 크게 제약할 것이고 남북한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어차피 북한경제는 일본의 보상금에 의해서든 조총련의 적극 지원에 의해서든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협 카드는 점점 쓸모가 없게 된다. 이 점에서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대북 정경분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대일 무역거래보다는 민족간의 거래가 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의 과도한 대북 경제진출을 저지 하기 위해서도 보상금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기정사실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를 들면,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남북합작의 발전소건설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는 등 남북경협의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문제는 경수로건설 사업으로 이미 한전이 북한에 진출해 있어 대북접촉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⁶⁷⁾

67) 이교덕,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53.

V. 결 론

일본의 원조는 1954년부터 아시아제국의 배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의 전쟁 때문에 상대국에 피해를 준 손해에 대한 배상 엔차관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중국, 한국 및 만주에서 잃은 시장과 원료공급을 동남아시아에서 구하면서 동지역과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하였다. 이시기의 원조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추진되었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일본의 원조는 상업주의에 의한 원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조의 정치적 이용은 냉전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의한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1960년대 일본은 사토수상 시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1973~74년의 OPEC에 의한 석유위기에 처해졌으며 동시에 원조의 확대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1970년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원조는 에너지와 자원을 필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되었다. 원조정책은 금액과 대상국을 확대시켰으며, 그 범위는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아프리카·중남미까지 넓혔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원조의 이념으로서의 인도적 고려 및 상호의존이라는 이념이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말부터 「총합적 경제원조」(혹은 총합적 원조협력)이라는 개념이 원조정책으로 정립되었다. 이전 개념인 경제협력과 총합적 경제원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총합적 경제원조」라는 것은 보다 넓은 외교목적에 이용 가능한 국가자원을 실제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좁은 상업적 이익의 구속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

다.

일본의 페르샤만에 대한 접근과 원조의 이용은 일본이 비군사적 대국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중재자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이란·이라크전쟁의 정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양측간의 가교 역할하려는 것이다. 가교라는 용어는 일본이 동서간, 남북간, 북중간, 베트남·ASEAN간, 남북한간 등의 가교가 되려는 의지의 단어라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베트남, 북한등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보조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위한 것이다.

1965년 6월 22일, 일본과 한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을 위해 일본은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달러, 유상(정부차관)2억달러 그리고 민간상업차관 1억달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시아의 공산세력에 대한 자유진영내의 결속을 강화하고 싶은 미국의 의도가 한국과 일본정부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외원조의 배후의 고려는, 크게 나누어 2가지 사고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그것이 해외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익론」(혹은 경제·금융면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경제적 역할론」)이다. 둘째는 필리핀정부의 안정을 마일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것에서 처럼 외교적성과를 중요시하는 「정치협력론」이다.

북·일수교교섭 타결전망은 보상문제, 과거사 문제, 관할권 문제, 이은혜 및 납치의혹 문제 등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일본측은 북·일 수교교섭을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일 수

교교섭에서 보상문제를 재산·청구권 문제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국교정상화 이전에 경제협력·배상은 하지 않을 것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진전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 대북경제협력이라도 한국에의 '배상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모든 것도 일본의 대북압력수단으로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북한은 보상문제를 한·일수교시의 방식에 의거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수교시 보상액수는 양측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내세우면서 한·일 기본조약 당시 한국에 제공한 ODA원조 무상 3억, 유상(엔차관) 2억달러의 연채이자를 감안한 액수(약 40억달러 상당)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소한 1백억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서 양측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과 수교시 제공할 ODA는 약 40억달러에서 약 100억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보상은 현물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인적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이 보상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북한이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면, 이는 장래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교후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의 개발에 참여시킬 것이다. 또한 조총련기업을 앞세워 추진하던 합영 및 위탁가공 사업에 일본기업을 진출시킬 것이다.

북·일 수교후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공여되는 보상금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북경제협력은 적어도 북한의 재정적 붕괴를 막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시 그만큼 한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북한 경제가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남한과의 경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는 북한이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험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과의 개방 및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국은 모색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대북 정경분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대일 무역거래보다는 민족간의 거래가 보다 유익함을 실득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의 과도한 대북 경제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보상금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일수교시 일본이 북한에 ODA를 제공(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할 때, 일본은 북한에게 자국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은 미국과 정치·경제·외교·안보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고도 폭넓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⁶⁸⁾

68) 향후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은 상호연계되어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규륜. 「동북아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교덕.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정재완. 「대미안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12.
- 經濟協力政府開發援助. 「世界の動き」(監時増刊). 1996. 2.
- 「對 フィリピン 擴大援助國會合」. 國際協力特別情報, Vol. 15, NO. 15, 1989. 8.
- 外務省 經濟協力局編. 「我が國の政府發展援助(上)」. 1987.
-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の政府發展援助(上)」. 1989.
-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の政府發展援助(上)」. 1996.
- 五十嵐武士 編. 「日本のODAと國際秩序」.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 鈴木宗男. 「世界が變わる日本が變わる」. 東京: 講談社, 1992.
- 田中義皓. 「援助という外交戰略」. 東京: 朝日選書 536, 1995.
- Hook, Steven W. *National Interest and Foreign Aid*.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Pubilshing, 1995.
- Triffin, Robert. *Gold and Dollar Crisis :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61.
- Yasumoto, Dennis T. *The Mannor of Giring : Strategic Aid and Japanese Foreign Policy*.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86.

Yasumoto, Dennis T. *The New Multinationalism in Japan's Foreign Policy*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5.

2. 논문

- 김도형. “일본의 대북한 경제정책.” 「미·소연구」, 제7집 1994.
- 김영춘. “수교협정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 7.
- 김영춘. “최근 북·일접근 움직임과 전망: 미국측 행보와 맞추어 수교협상진행.” 「통일한국」, 1996. 8.
- 이교덕. “한·일 회담에 비추어본 북·일 수교협상.” 「통일연구논총」, 제4권1호, 1995.
- 한영구. “한국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1990. 5.
- 한영구. “일·북한 수교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5.
- 美國大使館廣報·文化局. 「アナリカ政策シリーズ・67」, 1984. 8. 24.
- 稻田十日, “ODA 日本外交.” 五十嵐武士編. 「日本のODAと國際秩序」,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 稻田十日. “日本の援助外交: 民主化·市場經濟化支援の理念.” 草野厚·梅本哲也編. 「現代日本外交の分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 重村智計. “日·北國交正常化の展望.” 「한·일워크샵: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8. 28.
- 鈴木靜夫. “對フィリピン多國間援助計劃と 同國の政治動向.”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8.
- 高林義久. “ODA一兆千億円の效用を問う: 戦略なき政府開發援助排

- せ.” 「正論」. 1997. 2.
- 美議會調査局報告書 “スピツク・クラーク兩其他失ったら” 「世界週報」.
1986. 4.
- 山本構土. “日韓關係の位相.” 「世界」. 1981. 4.
- 横田洋三. “岐路に立つ日本の政府開發援助.” 「國際問題」. 1997. 10.
- Caldwell, Alexander J. “The Evolution of 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1950-1970.” in Hardod B. Malmgren(ed.), *Pacific Basin-Develogment: The American Interests*.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72.
- Inoguchi, Takashi. “Japan’s Images and Options : Not a chsllenger, But a Supporter.” *Journal of Japanese Studies*. winter 1986.
- Scalapino, Robert. A. “The Foreign Policy of Modern Japan.” in Roy A. Macredis(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8th edition. Englewood Cliffs, N. J. : Printice Hall, 1992.
- Akaha, Tsuno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 Survey*. wol. 31, no. 4, April, 1991.
- Inoquchi, Takashi “Japan’s Images and options : Not a challenger, But a supporter.” *Journal of Japanese Studies*. Winter 1986.
- Okuma, Hiroshi “Japan in the World : The Capital Recycling programme.” *Trocaire Development Review*. 1988.
- “Takeshita Announces ‘Internatponal cooperation Initiaire’.” *Japan Report*. May, 1988.
- Yasutomo, Dennis T. “Why Aid? :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3. 기타

「朝日新聞」.

「日本經濟新聞」.

「毎日新聞」.

「實業新聞」.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혜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박배산 조한범	인식조사 결과 영정상 공저	호호 호호 호호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발간예정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는 점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을 바랍니다.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